

기후변화; 膨脹시대에서 收斂의 시대로



구길본
북부지방산림청장

2008년도 지구촌에 불어 닥친 최대의 바람을 뽑는다면 금융위기바람과 기후변화바람, 즉 금풍(金風)과 온풍(溫風)을 뽑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이 두 바람은 경제와 자연환경이라는 지구촌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을 동시에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인류사회에 미칠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 미국 발 금풍은 지난 30년간 세계경제패권국가로서의 지배적 경제이념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종언 또는 월가라는 패권금융패러디임의 한계라는 말로 함축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고 찰스 킨들버거교수가 지구상 금융패권이 100년 단위 주기로 이동해온 분석결과를 인용하면서 차기 금융패권이 중국과 일본에게로 이동할 조짐으로 보는 이도 있다. 이러한 金風이 가져올 세계 경제의 틀의 변화와 금권의 대이동이 가져올 직접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라는 溫風이 오히려 영향력의 지속성과 중국에는 인류문명의 생존 자체에 직결되는 더 큰 잠재적 위협이 될 것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은 탄소배출을 이대로 계속할 경우 금세기말에는 지구평균기온이 6.4℃ 상승하고, 빙하들이 녹아 해수면이 59cm나 상승할 것이라는 위기를 예고하였다. 실제 이러한 현상들은 속속 우리 귀로 전해지고 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급속히 줄고 있고,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 갠지즈강의 수위가 30년 내 고

갈되고, 곳곳에서 대형 홍수, 허리케인, 사막화의 가속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온난화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구생명의 80% 이상이 소멸하는 빙하기가 앞당겨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의 위협이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빈번 막대해진 기상재해, 긴 여름, 사과 재배적지가 대구에서 양구로 이동했음이 대변하는 아열대성 기후변화와 식생대의 이동, 해수면의 상승; 제주지역 40년간 22cm 상승, 육상·해양 생태계의 급속한 교란 등 생활과 자연 질서의 변화가 가시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자연의 변화, 생명의 위기로 이어지는 파급과정을 동양의 우주 원리인 음양오행과 주역의 프리즘을 통과시켜보는 것도 현 국면, 즉 인류사회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양의 원리에 따라 변화하는 우주의 질서는 크게 四相으로 나눈다. 싹을 틔워 자라고(生), 무성하게 팽창하고(長), 열매 등 작은 점으로 수렴하고(收), 땅속으로 감추고 숨는(藏) 순환하는 相입니다. 작금의 금풍이나 온풍은 長의 팽창단계의 후반부에 있을 것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미래는 자연히 팽창의 시기를 접고 내실을 다져 질적으로 수렴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이를 세분한 24 절기로 보면 長의 정점으로 향하는 小暑에서 大暑로 넘어가서 立秋를 바라보고 있는 국면에 처해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좀더 복잡하게 엮은 주역의 64괘로 보면 上經의 마지막 전전단계인 28번째 괘인 澤風大過로서 보급자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 흔들리는 형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바로 지구의 인류사회를 떠받치는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기둥이 요동치는 형국이라는 풀이이다. 도가에서 말하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회귀한다는 物極必反의 지혜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야말로 인류사회가 산업혁명 후 팽창 발전시킨 산업경제와 환경적 변화인 온난화의 최고점이 가까워지면서 기후변화의 위협들은 반전을 위한 고통의 몸부림이 아닌가 한다. 서양의 물질문명 중심주의에서 동양의 정신문화를 중시하는 시대(東道西器)로, 과잉생산과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서 검약과 절제의 시대, 즉 팽창에서 수렴의 시대로의 전환의 시급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인류의 생존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국의 스텐보고서는 2007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 1% 약6500억의 비용을 투입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것을 역설하였다. 얼마 전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로 감축할 것을 합의하였다. 올해 내놓은 월드위치의 창설자 레스터 브라운의 플랜B에서는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세계국내총생산의 2%의 비용이 필요하고, 실천도 군사작전과 같이 초고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우선 과제인 기후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림조성의 확대, 재생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정부도 지난 8월15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주요전략으로 탄소배출감축, 재생에너지 개발, 저탄소녹색기술개발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성장 저탄소 사회로 가는 두 중심축은 바로 '탄소배출의 감소'와 '탄소흡수의 확충'이다.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산업계의 노력 못지않게 탄소흡수의 확충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조성 및 육성보전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탄소감축 의무 국가인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6%중 3.9%를 산림부문에서 충당하도록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인 2013년부터 감축의무

국이 될 것으로 확실히 되는 우리 정부도 우리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탄소흡수원 인정을 받기 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실행계획의 마련과 경영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탄소흡수원 인정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기법, 기준 등의 연구를 우선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 기후변화연구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으로 신규조림, 재조림 및 산림경영, 생태계 복원, 해외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배출요인인 산림훼손과 산불 등의 산림재해 발생의 최소화,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건설 등의 소재들을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목재소재로 대체 사용하는 목재문화의 창달 등의 다각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하려면 산림행정,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임업인 및 국민 모두의 저탄소 사회를 위한 공동인식과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 그리고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많이 분포하고, 산림경영 활동도 활발한 산악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정부차원의 재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에서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지방행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탄소마일리지제도 운영, 탄소흡수산림 활동 인정, 탄소발자국지우기 캠페인, 사랑의 빨감 나누어주기 등 작은 활동에서부터 도시교통체계 및 생활방식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천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사회로 가는 통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은 12탄소 톤에 이른다. 산림 1ha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7.2탄 소톤 쯤 된다.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지금의 10배로 늘리든지, 탄소배출을 지금의 1/10로 줄이든지 해야 흡수와 배출이 동일한 탄소중립사회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 둘을 병행하는 노력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산업활동과 탄소흡수를 확충하는 녹색활동을 통하여 팽창중심가치에서 수렴중심가치의 미래 복지사회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 기후변화를 극복할 것을 제안해본다. 